

현안연구 2022-48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신동철·이문호·강두현

연구진 profile

신동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농업경제학 전공◦경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방안 연구(2022)◦경상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방안 연구(2021)
이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제산업연구실장◦농업경제학 전공◦경남 농어업 고용노동자 근로실태와 개선방안(2022)◦경남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2)
강두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농업경제학 전공◦경남 농어업 고용노동자 근로실태와 개선방안(2022)◦경남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2)

요약 및 정책함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이를 추진하는 농어업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를 독려하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경남 등 9개 도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농민기본소득 등의 명칭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 광주, 부산 등 광역시에서도 조례 제정 및 논의가 진행 중임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잦은 민원 발생과 행정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목적 및 내용

-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수혜자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 개선의 방향을 정립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도출
- 유사한 타 시도의 정책과 비교하여 경상남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특징을 고찰

□ 주요 연구 결과

- 경남은 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연 1회 각각 30만원을 지급
- 타 시도와 비교한 결과, 통해 경남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낮은 수준의 지급금액, 오프라인 중심의 신청절차와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지급수단, 이행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80%를 밑돌고 있음
- 심층면접조사 결과, 현장 실무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점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사용 방식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개선방안

- 사업목적의 확대,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신청절차 및 서류·행정절차 간소화, 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제안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내용	2
II. 사업개요 및 현황	4
1. 사업개요	4
2. 사업현황	8
3. 시사점	11
III. 조사 결과 분석	12
1.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12
2. 시군 담당자 및 농업인 대상 심층면접조사	21
3. 시사점	26
IV.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27
참고문헌	3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이를 추진하는 농어업 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정책적 지원 확대
 - 정부 차원에서는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와 어업 분야의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농어업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두 직불제 모두 중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도 포함
 - 광역지자체에서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 등 9개 도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추진하고 있음
 - 광역시 차원에서는 울산광역시 2023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인천, 광주, 부산에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논의가 진행 중임
- 경상남도는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
 - 2020년 제정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본 사업의 법적 근거임
 - 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 단체와의 수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¹⁾
 - 경상남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과 이에 따른 농어업활동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임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 1회 30만원을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잦은 민원 발생과 행정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발생
 - 전체 신청인 237,711명 중 약 11.4%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

1) 이문호, 강호동, 정관용(2020).

- 의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였음
- 농어업인 중 산불감시원 등 한시적 직장가입 등으로 제외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9월 직장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접수를 실시함
- 그 외 공동경영주 미 등록,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상남도는 직장가입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제도 홍보,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사용처 등에 있어 민원이 다수 존재

2. 연구 목적

-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우리 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과 유사한 타 시도의 정책과 비교하여 사업 개선의 방향을 정립
-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수혜자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

3.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내용

-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식 등 경상남도의 사업 추진 내용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특징을 밝힘
 -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경기 등 9개 도와 울산광역시와의 사업 내용을 비교 검토함
- 수혜자의 만족도와 현장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시군별로 임의추출한 65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음

- 온라인 설문조사는 경상남도 4-H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 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설문지 배부 및 취합
- 온라인 방식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는 305명임
-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시군 담당자와 도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 실시
 - 시군 담당자는 계속 업무 여부와 신청자 및 제외자 수를 고려하여 5개 시군을 선정하였음

II. 사업개요 및 현황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경상남도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 실시
-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뿐 아니라 배우자를 공동경영주²⁾로 추가하여 농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 공동경영주 별도 지급 방식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의 의식 고취 및 권익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급 금액은 농가 당 최대 60만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
 - 재원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
 -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는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현장의 민원 내용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 경남도는 농어업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추가 접수를 실시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을 도모
 -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³⁾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의 부정 수급자는 기존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경영주의 농어업인 중 “배우자”에 한해 희망 여부에 따라 등록.

3) 경남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안)에서 제시한 지급제외 조건으로 농어업 이외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라면 이는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지급제외자에 포함하였음(이문호 외 (2020). 또한, 이 기준은 공익직불제 상에서도 적용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은 이·통장 제출이 우선으로 하면서 읍·면·동 제출을 병행하였으나 신청서 분실, 행정착오로 인한 접수 누락 최소화를 위해 읍·면·동 제출로 변경함
 - 신청자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인에게 접수확인증을 교부함
- 의무이행 사항인 농어업인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공동체 활동 점검
 - 시군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의 30% 이상 표본 점검 또는 3~5개 읍·면·동 전수 점검 예정
 - 2022년은 계도기간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유예함

(표 2-1) 타 시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과의 비교(사업개요)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 (백만원)	부담비율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경남	247,000	75,480	도 40% 시군60%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	지역화폐(시군) 농협채움카드(시군) 선불카드(도)	연 1회
강원	84,723	59,306	도 60% 시군40%	농가당 70만원	선불카드(도) 지역상품권(시군)	연 1회
경기	230,100	147,200	도 50% 시군50%	농민 1인당 5만원	지역화폐(시군)	월 1회*
충북	93,000	55,800	도 40% 시군60%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시군)	연 1회
충남	250,000	144,750	도 40% 시군60%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이상 1인당45만원	지역화폐(시군)	연 1회
경북	230,400	138,240	도 40% 시군60%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시군)	연 2회
전북	118,000	70,600	도 40% 시군60%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시군)	연 1회
전남	220,305	132,200	도 40% 시군60%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시군)	연 1회
제주	46,000	18,320	-	농업인 1인당 40만원	지역화폐	연 1회
울산	10,000	6,000	시 80% 구군20%	농가당 60만원	현금	연 1회

주) 경기는 월1회 5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적 간소화를 위해 4, 8, 12월에 각각 4개월 분의 수당 지급도 허용하고 있음.

자료) 시도별 2023년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타시도와의 비교

- 경남의 사업비 비율은 강원, 경기를 제외한 다른 도와 동일함
 - 강원은 도비 60%, 시군비 40%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도비 비율이 가장 높음
 - 경기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경남, 충남, 제주이며 그 외 지자체는 농가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경남의 지급금액은 농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광역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임
 - 충남은 농업인 1인 가구인 경우 80만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농업인 1인당 45만원을 상한없이 지급하고 있음
 - 제주는 농업인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경남의 지급금액은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60만원이나 농업인 1인 가구일 경우 3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임

- 지급방법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시기는 연 1회가 가장 많음
 - 시군의 지역화폐 지급 이유는 대부분 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임
 - 경남에서만 유일하게 농협채움카드(포인트)를 도입하고 있음
 - 지급시기는 경북이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는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적 간소화를 위해 4, 8, 12월, 연 3회 지급도 허용하고 있음

- 거주기간은 1~2년 이상 계속이 많으며 영농종사기간은 모두 1~2년 이상 계속임
 - 거주 기간 자격에 있어 대부분 계속 거주 조건을 두고 있으나 경기는 비연속 5년 이상을 두어 다른 도와 차이를 보임
 - 경남의 거주기간 및 영농종사기간은 1년 이상 계속으로 지자체 중에서 짧은 편에 속함

- 신청방법은 대부분 오프라인 방식인 가운데, 경기, 경북, 제주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경기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안에서 신청 및 행정절차 간소화

를 추진하고 있음

- 경북은 공공마이데이터플랫폼 모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휴대폰 어플을 통한 신청도 가능
- 경남, 강원, 전남, 울산을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
 - 경기와 경북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리 간편화를 동시 추진하고 있음
 - 경남도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수당 지급에 따른 의무이행조건 및 점검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 포함 8곳임
 - 의무이행조건 및 점검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경기, 충북을 제외한 8곳이며, 의무이행조건 미이행에 따른 환수 조치 등을 명시한 광역지자체는 경남과 강원, 전북뿐임

(표 2-2) 타 시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과의 비교(신청 및 기타 사항)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	의무이행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오프라인	온라인		조건 점검	관련 조치
경남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	○	X	X	○	○
강원	2년 이상 계속	2년 이상 계속	○	X	X	○	○
경기	최근 연속 2년 비연속 5년	1년 이상 계속	○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X	X
충북	3년 이상 계속	3년 이상 계속	○	X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스템	X	X
충남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	○	X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	X
경북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	○	○ (모이소 시스템)	모이소 시스템	○	X
전북	2년 이상 계속	2년 이상 계속	○	X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	○
전남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계속	○	X	X	○	X
제주	3년 이상 계속	2년 이상 계속	○	○	농민수당전산시 스템	○	X
울산	계속	계속	○	X	X	○	X

자료) 시도별 2023년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사업현황

□ 2022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수혜인원은 210,432명, 지급액은 631억 원

○ 경상남도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경상남도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08,181명 중 76.9%인 160,143명이 신청하였음

- 공동경영주 신청자는 77,568명임

(표 2-3)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 및 제외 현황

구분	신청인 수	경영주	공동경영주	제외인원	수혜인원
경상남도	237,711	160,143	77,568	27,279	210,432
창원시	22,073	14,462	7,611	1,948	20,125
진주시	22,323	14,578	7,745	2,038	20,285
통영시	8,085	5,414	2,671	1,155	6,930
사천시	12,835	8,703	4,132	2,116	10,719
김해시	12,507	8,441	4,066	1,246	11,261
밀양시	20,292	13,712	6,580	2,113	18,179
거제시	11,362	7,362	4,000	1,429	9,933
양산시	4,909	3,236	1,673	546	4,363
의령군	7,711	5,470	2,241	969	6,742
함안군	11,352	7,874	3,478	1,858	9,494
창녕군	13,865	9,562	4,303	1,573	12,292
고성군	11,031	7,605	3,426	1,291	9,740
남해군	12,654	8,382	4,272	1,719	10,935
하동군	13,680	9,336	4,344	1,336	12,344
산청군	11,168	7,616	3,552	814	10,354
함양군	12,141	8,177	3,964	1,929	10,212
거창군	15,021	10,039	4,982	1,878	14,143
합천군	14,702	10,174	4,528	1,321	13,381

주) 직장가입자 지원대상 제외 전의 수치임.

자료)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전체 신청자 중 1년 미만 거주,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27,279명을 제외하면 수혜 농어업인은 210,432명이며 지급금액은 631억 원임
- 수혜 농어업인 수는 시군별로 진주시가 20,285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20,125명, 밀양시 18,179명 순임

(표 2-4) 지급 제외 사유별 현황

구분	합계	1년미만 거주	1년미만 경영주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	공동 경영주 미등록	경영주 조건 미충족	기타
경상남도	27,279	1,507	4,458	2,304	14,494	2,644	512	1,360
창원시	1,948	21	121	221	1,456	20	0	109
진주시	2,038	57	434	292	974	148	53	80
통영시	1,155	29	298	180	370	198	75	5
사천시	2,116	86	343	146	1,136	325	6	74
김해시	1,246	88	228	113	677	79	4	57
밀양시	2,113	177	381	224	990	98	166	77
거제시	1,429	64	255	190	768	103	0	49
양산시	546	44	109	84	220	29	11	49
의령군	969	54	191	18	569	67	14	56
함안군	1,858	51	206	76	926	485	34	80
창녕군	1,573	130	274	131	697	205	48	88
고성군	1,291	39	173	80	772	149	3	75
남해군	1,719	141	297	72	900	140	58	111
하동군	1,336	122	224	75	792	75	0	48
산청군	814	59	91	96	509	1	1	57
함양군	1,929	76	275	113	908	282	15	260
거창군	1,878	163	366	148	1,044	113	23	21
합천군	1,321	106	192	45	786	127	1	64

주) 직장가입자 지원대상 제외 전의 수치임.

자료)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제외 사유로는 직장가입자 14,494명, 1년 미만 경영주 4,458명, 공동경영주 미등록 2,644명의 순임

- 산불감시원, 농한기 단기 근무 이력 등을 통한 한시적 소득 확보, 주말 근무, 농업 관련 농외소득 확보 등의 사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인 수당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1년 미만 경영주, 공동경영주 미등록 등 농업인 수당 관련 정보 미취득으로 인한 민원 발생

□ 2022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의 연령대는 60대가 34.9%로 가장 높음

○ 49세 이하 층의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층의 비율이 82%에 달하는 등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특히,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65.7%에 달함

(표 2-5) 연령대별 지급 받은 농어업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29세 이하	312	0.1
30~39세	2,058	1.0
40~49세	7,829	3.7
50~59세	27,626	13.1
60~69세	73,279	34.9
70~79세	61,845	29.4
80~89세	34,684	16.5
90세~	2,451	1.2
합계	210,084	100.0

주) 직장가입자 지원대상 제외 전의 수치임.

자료)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경남은 2023년 754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247,000명을 계획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 한도액을 시군별 사업비의 1.5%에서 1.8%로 상향

3. 시사점

- 낮은 수준의 지급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농가 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업인 1인 가구의 경우 개별지급액이 30만원으로 지자체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함

- 오프라인 중심의 신청방법과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 부재
 - 신청서 제출이 기존 이·통장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바뀌고 접수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나 이 또한 읍·면·동의 업무 부담의 가장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음
 - 행정절차 간소화 시스템 부재는 시군 및 읍·면·동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 여성농업인에 대한 권익 확보 도모
 -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에 대한 의식 고취 및 권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주의 배우자인 공동경영주를 지급 대상에 포함

Ⅲ. 조사 결과 분석

1.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⁴⁾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경남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설문조사는 수혜자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조사대상

- 경남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은 경상남도의 수혜자 210,432명(2022년 지급대상) 대비 0.45%에 해당하는 955명이며, 상반기 접수 및 7월 지급인원으로 하반기 추가접수 인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방법

-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오프라인 방식은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에서 650명을 임의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온라인 방식은 경남 농업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으로 설문URL을 송부하였고 응답자는 305명임
 - 오프라인 방식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 방식은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하였음

4)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지원됨. 그러나 본 조사는 경남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의견을 파악하여 신규 농정 사업 분석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농업인에 한정하여 조사함.

(표 3-1) 경남의 농업인 수당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경남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의견을 파악하여 신규 농정 사업 분석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 상반기에 신청접수한 농업인 중 7월에 수령한 자(하반기 추가접수 제외)
조사 방법 및 인원	· 농어업인 수당 수혜자 : 955명 - 오프라인 : 650명 - 온라인 : 305명
조사 기간	· 오프라인 설문조사: 2022년 10월 1일 ~ 10월 30일 · 온라인 설문조사: 2022년 10월 13일 ~ 10월 30일

2) 조사 대상 일반 현황

-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영농경력 20년 이상의 고령농
 - 남성이 60.3%, 여성이 39.7%였고, 30대 이하는 9.8%, 60대 이상이 62.9%로 수혜자 대부분이 노인 세대로 나타남
 - 영농경력은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만큼 과반인 55.2%가 20년 이상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 영농규모는 전형적인 소농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0.1ha 이상 1.0ha 미만의 농가가 70.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ha 이상의 농가는 12.4% 수준이었음
 - 조사 대상 농가들은 여러 작물들을 중복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식량작물이 53.3%, 채소류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임산물은 4.2%, 화훼류는 0.6%임
 - 지급자격 유형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만 수혜를 받은 경우(30만 원)가 55.3%였으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60만 원)는 35.0%, 공동경영주(30만 원)만 혜택을 받은 경우는 9.7%였음

(표 3-2) 조사 대상 일반 현황

구분		응답자 수	비중(%)
전체		955	100.0
수혜자 성별	남성	576	60.3
	여성	379	39.7
연령	20대	17	1.8
	30대	77	8.1
	40대	70	7.3
	50대	190	19.9
	60대	290	30.4
	70대	214	22.4
	80대	97	10.2
영농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50	5.2
	3년 이상 ~ 5년 미만	83	8.7
	5년 이상 ~ 10년 미만	107	11.2
	10년 이상 ~ 20년 미만	188	19.7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7	12.3
	30년 이상 ~	410	42.9
영농규모	0.1ha 미만	22	2.3
	0.1ha 이상 ~ 0.3ha 미만	257	26.9
	0.3ha 이상 ~ 0.5ha 미만	217	22.7
	0.5ha 이상 ~ 1.0ha 미만	203	21.3
	1.0ha 이상 ~ 2.0ha 미만	138	14.5
	2.0ha 이상 ~	118	12.4
주요 작물	식량작물	509	53.3
	채소류	499	52.3
	과실류	214	22.4
	특용·약용작물	106	11.1
	화훼류	6	0.6
	축산물	72	7.5
	임산물	40	4.2
	기타	7	0.7
지급자격 유형 (조건)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528	55.3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	334	35.0
	공동 경영주	93	9.7

주) 주요작물은 복수응답으로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3)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1)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의 만족도

-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임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높은 수준이며 불만족에 대한 의견으로 낮은 수당 금액과 낮은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효과 미비가 있음

(표 3-3)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수혜자 만족도	28 (2.9)	146 (15.3)	515 (54.0)	264 (27.7)	953 (100.0)

주)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농업인수당 지급 정책 목표 및 홍보

- 응답자가 느끼는 농어업인 수당 목적은 사업 입안자가 고려한 목적과 부합
- 조사 응답자는 농업인 수당에 대해 마을 이장이나 관련 기관,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본 사업이 공익기능 향상과 농가 소득 감소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

(3) 농업인수당 지급 자격 및 운영

- 농업인수당 지급 자격 및 운영은 70%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지급 자격에 대한 만족도는 78.7%로, 지급자격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음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모두에게 지급하거나 농업인 개인당 수당 지급 등 지급자격 확대를 통한 수령 금액 향상을 원하고 있음

(표 3-4)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 정책 목표 및 홍보

구분		수혜자 수	비중(%)
농업인수당에 대해 알게 된 경로 (955)	가족 및 친인척	43	4.5
	마을 이장	296	31.0
	동네 지인	52	5.4
	개인 친목단체	27	2.8
	농어민단체	143	15.0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농협 등)	247	25.9
	언론매체(뉴스 및 신문 등)	140	14.7
	기타	7	0.7

주1)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구분 안의 괄호는 해당 설문문의 전체 응답자 수임.

(표 3-4)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 정책 목표 및 홍보(계속)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농업인수당에 대해 알게 된 경로 (955)	가족 및 친인척	43	4.5
	마을 이장	296	31.0
	동네 지인	52	5.4
	개인 친목단체	27	2.8
	농어민단체	143	15.0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농협 등)	247	25.9
	언론매체(뉴스 및 신문 등)	140	14.7
	기타	7	0.7
농업인 수혜자가 생각하는 정책 도입 이유 (952)	농어업의 공익 기능 향상	332	34.9
	농산물 가격 불안 등 소득감소 대응	262	27.5
	농어촌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	148	15.5
	농어민단체의 소득지원 요구	102	10.7
	직불금 등 중앙정부의 직접지원액 부족 보완	93	9.8
	기타	15	1.6
농업인 수혜자가 생각하는 수당 지급 목적 (954)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	262	27.5
	농어업 공익 기능 증진	110	11.5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37	24.8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125	13.1
	농어가소득 안정 도모	207	21.7
	기타	13	1.4

주1)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구분 안의 괄호는 해당 설문지의 전체 응답자 수임.

(표 3-5)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자격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지급자격 만족도	47 (4.9)	156 (16.3)	457 (47.9)	295 (30.9)	955 (100.0)

주)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표 3-6) 지급자격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지급자격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203	100.0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46	22.7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부부 한정)	40	19.7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부부포함 가족구성원 중 1인)	51	25.1
농어가 단위별(세대주)	23	11.3
농어민(개인)	42	20.7
기타	1	0.5

주) (표 3-5)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한 불만족도는 30.9%로, 종합소득 초과, 주소지 문제, 부정 수급자 제외 방식 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수준임
- 전반적인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 검토 필요

(표 3-7)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지급제외 대상	69 (7.2)	226 (23.7)	470 (49.2)	190 (19.9)	955 (100.0)

주)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율임.

(표 3-8) 지급제외대상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적절하지 않은 지급제외대상 항목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294	100.0
전년도 및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105	35.7
전년도 농지법, 산림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람	19	6.5
전년도 보조금 부정 수급자	31	10.5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분리한 사람	42	14.3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직장가입자	97	33.0

주1) (표 3-7)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서류 준비 및 직접 작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서류 준비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 세대가 많기 때문에 풀이되며, 서류 간소화 등의 행정 편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 3-9) 경남 농업인수당 신청과정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신청과정 만족도	27 (2.8)	137 (14.3)	507 (53.1)	284 (29.7)	955 (100.0)

주)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표 3-10) 신청과정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불만사유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163	100.0
지급신청기간	40	24.5
신청서 수령 및 직접 작성	44	27.0
증빙서류 준비 및 직접 제출	64	39.3
기타	15	9.2

주1) (표 3-9)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수급을 위한 이행조건에 대해서 76.8%는 만족하지만 불만족 비율은 23.2%에 달함
 -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나 일부 응답자들은 이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낌

(표 3-11) 경남 농업인수당 수령을 위한 이행조건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이행조건 만족도	37 (3.9)	183 (19.3)	548 (57.8)	180 (19.0)	948 (100.0)

주)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표 3-12) 이행조건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불만사유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216	100.0
대면/비대면 교육 검색 및 이수 어려움	114	52.8
마을 공동체(거주지/경작지) 활동 참여 어려움	86	39.8
기타	16	7.4

주1) (표 3-11)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별 지역화폐나 농협 채움카드 충전을 통한 농업인 수당 지급 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72.2%에 그침
 -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금 지급을 원하고 있음

(표 3-13) 경남 농업인수당 수령을 위한 지급수단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지급수단 만족도	65 (6.8)	200 (21.0)	440 (46.1)	249 (26.1)	954 (100.0)

주1)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14) 지급수단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지급수단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263	100.0
현금	184	70.0
지역화폐(상품권)	15	5.7
농협(채움)카드	22	8.4
자율선택(지역화폐(상품권) 또는 농협카드 등)	41	15.6
기타	1	0.4

주1) (표 3-13)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74.4%가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불만족 의견으로는 영농활동 준비나 농자재 구매 등 경비 지출이 많은 1~3월이나 4~6월에 지급되길 희망하고 있음

(표 3-15)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시기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지급시기 만족도	26 (2.7)	218 (22.9)	505 (52.9)	205 (21.5)	954 (100.0)

주1)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16) 지급시기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지급시기

구 분	1~3월	4~6월	7~9월	10~12월	계
적절한 지급시기	132 (54.3)	88 (36.2)	11 (4.5)	12 (4.9)	243 (100.0)

주1)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표 3-15)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3)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업인 수당 이행점검에 대한 만족도는 85.0%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불만족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

(표 3-17) 경남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의 이행점검(사후관리)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이행점검 만족도	22 (2.4)	117 (12.6)	625 (67.2)	166 (17.8)	930 (100.0)

주1)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농가 경제 및 사용용도

- 농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설문 항목 중 제일 낮으며 수당은 주로 경영비에 사용하고 있음

- 농업인 수당 지급금액 만족도는 46.4%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30만 원/명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

- 희망 금액으로는 현재 수준의 2배인 50~60만원을 원하고 있음
- 지급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18)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금액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
지급금액 만족도	171 (17.9)	341 (35.7)	321 (33.6)	122 (12.8)	955 (100.0)

주)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표 3-19) 지급금액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연간 1인당 지급금액

구 분	35만원	40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기타	계
적절한 지급시기	2 (0.4)	34 (6.7)	6 (1.2)	204 (39.9)	176 (34.4)	89 (17.4)	511 (100.0)

주1) ()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표 3-18)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3)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20) 지급금액에 대해 불만족하는 수혜자가 생각하는 지급금액 확대 방안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509	100.0
현재와 같이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112	2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지원한다	172	33.8
별도사업으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71	13.9
공익직불제 사업과 통합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154	30.3

주1) (표 3-19)의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자만 선택한 문항임.

2)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답자의 60.3%는 농업인 수당을 경영비(농약, 농자재, 비료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비에 사용하는 비율도 37.3%에 달함

(표 3-21) 경남 농업인수당 사용 용도

구 분	수혜자 수	비중(%)
전체	952	100.0
경영비(농약, 농자재, 비료 등)	574	60.3
생활비(식재료비 등)	355	37.3
부채자금(이자포함) 보전	3	0.3
친목도모 활동비	6	0.6
문화 및 여가 활동비	12	1.3
기타(자식 및 손주 용돈 대체, 미사용 등)	2	0.2

주) 미응답자로 인해 수혜자 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군 담당자 및 농업인 대상 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군 담당자를 통해 사업 추진 상의 애로 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설문조사에 파악하지 못한 농업인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조사대상

- 시군 담당자 심층면접조사는 사업 담당자 변경 여부와 신청자 수 및 민원 내용을 종합하여 통영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 조사 기간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임
- 농업인 심층면접조사는 농업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농업인 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진행함
- 2월 8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함

□ 조사내용

- 시군 담당자는 시군의 지급 현황, 주요 민원 발생 내용 및 대응, 지급 방식, 지급금액 상향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의무이행조건 이행점검, 행정 절차 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인터뷰함
- 농업인에게는 신청 서류 준비 및 사용에 따른 불편함, 지급금액 상향, 사업을 알게 된 경로, 의무이행조건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2) 조사결과

□ 수당지급액 증가는 필요하나, 경남도의 지원 확대는 필수

- 시군 담당자와 농업인들은 수당 지급금액 상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군의 입장에서는 경남도와 시군의 수당 지급금액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현재의 지급비율은 경상남도가 40%, 시군이 60%인데, 도비 비율을 50% 까지 올리는 방식으로의 대응을 언급

□ 행정 절차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가당 지원을 선호하지만 농업인은 개인별 지급 요구

- 현재의 지급방법은 농업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라 공동경영주에게도 개별적으로 수당이 지급됨.
- 시군에서는 현재의 지급방식을 농가당 수당 지급으로 개선하면 사업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공동경영주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지급방식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음

- 카드지급이 현실적이지만, 고령농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필요
 - 수당지급은 2023년부터 시군별에서 포인트, 선불카드, 지류화폐 중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2022년에는 NH채움카드(포인트 충전방식)와 선불카드로 지급하였음
 - 카드발급은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지만, 고령농의 경우, 카드발급부터 카드 관련 메시지 확인 등에 어려움을 느껴 민원이 많은 편임
 - 게다가 NH채움카드는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서만 포인트가 차감되고, 선불카드는 경남 전체에서 사용하는 등 사용처가 달라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음
 -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준지가 부산광역시면서 경남 도내에 매장이 있는 경우 NH채움카드 포인트 사용이 불가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음
- 이행점검은 행정공무원, 농업인 모두에게 부담
 - 올해부터 농업인수당 지급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각 시군담당자들은 개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에 대해 이행점검까지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게다가 농업인들도 연간 지급액이 30만 원인 상황에서 이행점검과 최대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절차 간소화는 필수
 - 시군 담당자들은 현재의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자격검증 방식이 번거롭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지 못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음
 - 농업인수당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시스템도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각 시군이 대면으로 접수받아 직접 작성하여 신청자누락 또는 정보 기입 오류가 많은 편임
 -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별도 신청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함

- 농업인들의 경우에도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들은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마산해양수산청까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상황임

- 용어 정의, 지급 대상자 제외 등 기타 민원 사례 빈번
 - 공익직불제에서 지정하는 공동경영주와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공동경영주는 차이가 있음. 이로 인해 읍면사무소로 공동경영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음
 - 또한, 농업인들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농업경영체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격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영농활동을 수행하면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표 3-22) 경남 농업인수당 시군담당자 및 수혜자 인터뷰 조사 결과

구분	시군 담당자	농업인수당 수혜자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 지급금액 상성은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경남도와 시군의 지급금액 비율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 4:6 →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당 확대가 필요함 포인트 등을 농업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농자재 구매 등으로 한정시키고, 지급액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지급자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면, 1개 농가에 대해 2번의 검증이 필요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짐. 따라서 농가당 수당을 지급 하면 사업대상자가 줄어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경영주(대부분 여성농업인)에게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 향상을 의미해 현재와 같은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업활동을 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함
지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인트, 선불카드, 지류화폐 중 선택하나, 대부분 NH채움카드로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사용함. 다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카드 발급부터 카드 메시지 확인, 사용처 확인 등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민원이 많은 편임 포인트는 시군 지역 관내, 선불카드는 경남 전체로 사용처가 각각 달라 농업인들이 사용처에 혼란을 느낌 예) 사업자등록증이 부산광역시이나 매장이 경남에 있는 경우, 농업인수당 사용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포인트는 지역 관내(진주시 등), 선불카드는 경남 전체로 사용처가 각각 달라 농업인들이 사용처에 혼란을 느낌 예) 사업자등록증이 부산광역시이나 매장이 경남에 있는 경우, 농업인수당 사용 불가함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행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경작확인서 확인이나 가장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행점검까지 받아야 하니 부담스러움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보공공 이용을 통한 자격검증 방식이 번거로움 사업 신청서 간소화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별도 신청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 30만원을 위해 증명해야 할 서류가 많고, 농업인들의 경우,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마산해양수신청까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까다로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경영주 개념을 몰라 읍면사무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옴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접수 받아 작성하여 오류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시를 짓지 않는 경영체에게는 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 4대보험 등과 관련 없이 농사만 짓는다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함

주) 시군 담당자 및 농업인수당 수혜자 인터뷰는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함안군, 함창군, 의령군, 거창군 등에서 진행함.

3. 시사점

- 지급 금액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확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농업인수당 사업은 농가 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나 많은 응답자들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지급 금액 향상을 요구
 - 이는 경상남도 및 시군의 농정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으로 급진적인 지급금액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마을 이장 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 확산할 필요 있음

- 사업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통합 DB 관리와 행정절차 간소화, 담당인력 충원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업인수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 사업의 목적과 이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준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수당 사용 방법(포인트)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IV.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사업목적의 확대

-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목적은 ‘경상남도 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남 전체 도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을 ‘경상남도 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에 따른 농어업인활동 지원’으로 확대

□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

-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단순히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함
 - 농업인에게는 정책 목적, 신청 절차,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수당 사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민에게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이것이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 홍보

□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

- 지급금액을 1인당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지속적인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요구와 행정의 정책적 수용 가능성이 충돌하는 문제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재정여건을 고려한 협의과정이 필요함
 - 특히, 현재의 자원 마련 비율이 도 40%, 시군 60%이기 때문에 지급금액 확대에 있어서 시군의 의견 청취도 필요함
- 게다가 현재의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유와 경과 등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이장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통해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신청절차 및 서류, 행정절차 시스템 간소화

- 현행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중 마을에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생략 가능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사업을 신청한 이력과 수당을 지급 받은 농업인의 경우 반드시 갱신이 필요한 서류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신청시에는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
 -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도 병행하여 추진

□ 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자의 지원요건 검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이·통장 등을 통해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검증을 하는 방식이 매우 번거로우며, 농업 외 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도가 관계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농·임·어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 결과를 취합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원요건 검토를 지원
- 또한 부산지방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시군이 검증기간 내 관할 지방세 무서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당해연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이 의무이행 사항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임
 - 2022년은 계도기간으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음
- 이에 대해 농어업인 및 현장 실무자의 우려가 있을지라도 의무이행사항의 철저한 준수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독려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무이행사항 이행점검은 사업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강화하여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함

□ 알기 쉬운 지원수당 사용처 표시

- 2022년 추가 접수 이전에 신청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농협채움카드의 포인트로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수당 사용처가 시군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사업체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시군 관내에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타 지역으로 된 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아닌 계좌에서 차감되어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 농어업인 수당을 위해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애로사항은 다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제로페이 표시와 같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사용가능업소’ 스티커를 제작, 시군별로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사용가능 업체에 배부하여 수당 사용가능 업체를 알리는 조치가 필요

참고문헌

강원도 농정과(2023),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경기도 농업정책과(2023),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세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2023),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경상북도 농업정책과(2023),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울산광역시 농축산과(2023), 2023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

이문호, 강호동, 정관용(2020), 경상남도 농민수당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경남연구원.

전라남도 농업정책과(2023), 2023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라북도 농산유통과(2023), 2023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2023), 2023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충청남도 농업정책과(2023),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충청북도 농업정책과(2023),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3월 27일
발 행 2023년 3월 31일
발 행 인 송 부 용
발 행 처 경 남 연 구 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우 : 51430)
248 Yongji-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430
Tel (055)267-7447. Fax (055)266-2079
homepage : www.gni.re.kr
ISBN : 978-89-8351-911-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